

“육지 됐는데 왜 택배비 할증하나” 섬 주민들 반발

연륙 연도교 놓인 완도·신안 주민들 “택배 화물 요금 낮춰야” 개선 요구

“다리가 연결돼 택배차량이 오가는데 왜 선박이 용 할증요금을 내야 하나?”, “이제 육지가 됐는데 도서지역 할증요금 500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완도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다.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육지화됐는데도 택배회사들이 전남의 일부 섬에 여전히 할증요금을 부과해 섬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섬이 있는 전남 사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전남지역 일부 섬들이 육

지인데도 도서 지역인 토도리와 같은 법정리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택배회사에서 일괄 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완도로 귀어한 한 주민이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완도군은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의 경우에도 목포와 압해도가 이어진 연륙교가 개통된 이후부터 택배요금 할증에 대한 불만 제기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연륙·연도교 개통이 이어

지었는데도 도서 지역인 토도리와 같은 법정리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택배회사에서 일괄 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완도로 귀어한 한 주민이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완도군은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의 경우에도 목포와 압해도가 이어진 연륙교가 개통된 이후부터 택배요금 할증에 대한 불만 제기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연륙·연도교 개통이 이어

지면서 관련 민원도 생기고 있다”며 “국민신문고로 거쳐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택배 화물 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수용돼 개선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섬의 경우 육지와 연결됐더라도 오지와 마찬가지로 원거리지역인 데다 택배비 등은 민간 계약이므로 이를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 시도가 과거에 있던 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와 정부에서 개입하지 못했다”며 “불합리한 요금 적용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도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지속해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완도군, 국도 승격 촉구

완도군이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방도 830호선인 완도-고흥 간 도로는 전남에서 부산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도로 구간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는 해상 교량 5곳 10.2km와 접속도로 17.2km가 개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접근성 개선과 관광 활성화는 물론 연륙 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완도군은 기대했다.

완도군은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완도-고흥 간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범군민 대책기구 구성, 국도 승격 촉구 공동 결의문 채택, 심포지엄 개최, 군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최근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회의원 등을 만나 주민 숙원을 건의했다.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 도로 국도 승격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모으고 대내외에 알리는 군민 서명운동도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가 제2차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도 승격의 주춧돌이 될 서명운동에 군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830억대 목포 소각장공사 단독입찰 인정...정당성 논란

제3자 제안공고 한차례로 결정 “지방계약법 위반 재공고 해야”

목포시가 830억대 대양동 소각장 공사 입찰을 놓고 단독입찰도 인정하기로 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엔 재공고를 함에도 목포시는 경쟁자가 없어도 이를 인정, 해당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포화 상태인 위생매립장 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 자원회수(소각)시설(조검도)을 새로 설치한다.

이 시설은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지역(압해읍·지도읍 등 8개 읍·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20 t (목포 200 t, 신안 20 t)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98% 가량 사용된 목포위생매립장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설치되는 자원회수처리장은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내 토사는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분리해 소각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건축면적 4800㎡ 규모로 총 사업비 830억원 중 국비 356억원을 제외한 474억원이 민간투자(BTO)를 통해 진행된다.

민간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으로 건설한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목포시와 신안군으로부터 쓰레기 소각처리비용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시설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으며, 제3자 제안공고안 제출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면 실시협약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기간은 33개월로 오는 2024년 6월경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목포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는 제3자 제안공고안 내용에 최초제안자 외에 다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최초 제안자로 적격심사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계약법에는 경쟁이 되지 않는 단독입찰의 경우 재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 계약부서 담당자는 “경쟁이 없는 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에 저촉된다. 제3자 제안공고안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한 계약 역시 복수의 입찰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



정을 위해 사업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도 1%로 특혜시비를 원천 차단했다”면서 “민간투자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최초제안자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고 소각장 설치 시급성을 고려해 재공고 없이 1차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레바는 폭발 남 일 아니네”...여수산단 긴급 점검

여수시, 질산암모늄 관리 현황 파악

레바는 베이루트항구 대폭발 사고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자 화학공장으로 가득찬 여수산단이 있는 여수시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여수시는 지난 6일 질산암모늄을 생산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휴켄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였다.

질산암모늄은 레바는 폭발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수시는 점검 결과 질산암모늄 생산과 저장, 출하 과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휴켄스는 연 13만t에 이르는 질산암모늄을 생산하고 있다.

수출하거나 내수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생산 후 3일가량 저장하는데 저장량은 하루 평

군 1300t가량이다.

하얀 쌀 모양의 질산암모늄은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했을 경우 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질산암모늄 자체에는 불을 붙여도 폭발 위험은 거의 없는 데 유류 등 다른 화학물질이 결합하면 폭발 위험이 커진다”며 “휴켄스는 질산암모늄 자체만을 보관하고 있어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2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안전관리체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단 내 화재·가스누출·폭발 등 143건의 사고가 발생해 76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전체 인명 피해자



여수시가 레바는 베이루트항구 대폭발 사고를 계기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질산암모늄 생산관리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사진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시 제공)

가운데 사망자는 34.8%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 사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40건, 폭발 19건,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18건, 기타 2건 순이었다.

재산피해액은 488억원에 달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화순군, 농작물 피해 예방

유해 야생동물 900마리 포획

화순군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권역별로 운영 중인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모범 수렵인 39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포획단은 올해에만 멧돼지 222마리, 고라니 709마리 등 모두 931마리를 포획했다.

화순군은 포획단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농작물 훼손을 방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을 예방하는 등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본 주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화순군청 환경과에 신고, 기동포획단 출동을 요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권역별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면서 포획 실적이 크게 늘었고 농작물 피해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수확기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